

#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미안”

###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밝혀 부인 선거운동 강요 생각 없어 ‘전두환 발언’ 호남인에 사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박 대통령 탄핵 이후 검찰 특수본에서 넘어온 사건을 제가 담당하진 않았지만, 원인이 되는 삼성 사건을 저희가 했고 제가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몇 가지 여죄를 저희가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라며 “지금은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입장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법적인 판단과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결단이나 판단은 서로 차이를 달리하는 것이고, 국가 발전과 국민 미래를 위해 잘 조화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윤 후보는 허위 이력 의혹을 받는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저나 제 아내 입장에서 이 사과가 충분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진정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인과 유세 등을 함께 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라며 “저도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방침에 대해 “제 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청와대 근무 경험 많은 선대위 관계자들과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며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청와대 고위직 근무했던 분들한테 들어보니, 비서실 지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후보는 당 내홍 상황과 관련,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쓴소리하고 건의해야 할 이야기와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를 명확하게 가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과 갈등 양상을 보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것(대선 결과)이 향후 본인의 정치적 입지나 성취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실언 논란에 대해 “제 잘못이고, 국민의 비판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점과 철학에 입각해 말씀드렸는데, 정치 세계는 공직 세계나 학문 세계와 달라 상대에게 빌미를 주면 늘 왜곡되고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제가 좀 대처를 못 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부연했다.

“전두환 평가” 발언 논란을 두고선 “민주당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으면 관참았을 텐데 국민의힘 후보가 그 이야기를 하니 호남인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았나 해서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조건부 토론 수용’에 민주 “초등 반장선거도 토론”

### 조건 붙이는건 ‘가짜 민주주의’ 특검을 TV토론 방패막이 삼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조건부 토론 수용 제안에 “가짜 민주주의”라고 심자포화를 퍼부었다.

윤 후보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 뒤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기본적으로 저와 토론하려면 대장동 특검을 받고 여러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를 하면서 후보 간 토론을 흥정 대상으로 삼는 후보는 보보다 더 처음 본다”며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토론 없이는 안 한다”고 비꼬았다. 윤 원내대표는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조건을 붙이는 것은 스스로가 가짜 민주주의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토론을 내팽개치고 대권만 잡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독재를 낳는 씨앗”이라고 일갈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고, 여야 간 (특검)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특검을) TV토론에 대한 방패막이 삼아 들고나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의 상임선대위원장 사퇴

뒤 연일 파열음이 이는 국민의힘을 직격하며, 내홍을 부추겼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선을 위해 치열한 정책경쟁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윤 후보는 내거티브에 올인하고,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을 비롯한 의원들은 당 대표 죽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며 “국민은 그만 보고 싶은 막장”이라고 지적했다.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도 TBS 라디오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것은 ‘윤핵관 그만둬라. 그 다음에 위 본부 해체하고 판을 새로 짜자, 슬림하게 민주당처럼 하자’는 얘기”라며 “그게 뭐 어려운 일이나”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 사과와 추가 의혹을 고리도 한 공세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과 검찰개혁’ 공저자인 조성식 작가 등을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검증특위위원으로 임명하고, 윤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을 계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씨를 겨냥, “구체적인 소명과 책임은 속뺄놓고 알맹이 없는 맹탕 사과문만 낭송했다. 신뢰를 보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씨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하며, “석사 자격증이 무슨 필사 자격증이나”라며 “이상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운데)가 28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30일 본회의 소집’ 이견...미디어특위 연장 불투명

### 민주, ‘특위 기한 연장’ 제안 국힘은 ‘1월 재구성’ 주장

28일 여야가 연말 국회 본회의 소집을 두고 협상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30일 본회의를 소집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활동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기한 연장도 불투명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적어도 30일 오후 3시에는 본회의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야당과 협의했는데 결렬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려고 하는 것은 미디어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이 (특위) 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데, 시한 연장 의결을 통해서 특위 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11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특위 기한 연장과 민생법안, 여야

선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연내 본회의를 열고 다음 달 11일 한 차례 더 열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윤 원내대표는 밝혔다.

이에 따라 미디어특위 기한 연장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1월에 특위를 재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활동 기한 종료 전 연장을 결의하는 것이 관계이자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본회의를 단독 소집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 원내대표는 29일 야당과 추가 협상 여부를 묻자, “협상을 계속할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국회의장에게 여야 협상 과정을 보고하고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송형일 광주시의원, 광역의원 청년선거구 철회 요청

### 민주당 광주시당에 이의 신청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시의회 여성·청년 선거구 8곳을 확정하는데 대해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송형일(서구 제3선거구) 의원은 28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자신의 지역구에 도입한 청년경쟁 선거구 철회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선거기획단은 서구 제3선거구를 청년경쟁선거구로 결정한

명확한 기준, 이유 등 사전설명 없이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구 제3선거구는 현역의원 및 청년 이외의 정치 입지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해당 선거구 주민은 선택권을 제한당하게 된다”며 “철회하지 않을 시 향후 법률적 대응 등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에 이의신청도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2일 광역의원 여성경쟁 선거구 4곳, 청년경쟁 선거구 4곳을 지정했다. 청년 선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될 수 있다

### 출마 연령 만 25→18세 의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처리되는 국회의원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가 돼야 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 의결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 등 젊은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